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발표 – 점검 대상 대 폭 확대 및 제재부가금 상향

2026.03.23

1.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발표

정부는 2026. 3. 10.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부정수급 근절대책은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대상 대폭 확대

정부는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대상이 202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약 6,500건 수준으로 늘어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의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보조금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6,700건도 신규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 제재부가금 및 신고포상금 대폭 강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역시 크게 강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제재부가금 상한을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하고,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고 환수 금액의 30%(소액인 경우 500만 원 정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부정수급 판단 및 제재 결정 체계 개편

부정수급 여부 및 제재 수준 범위를 기획예산처 주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여부 및 그 수준을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부정수급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라. 보조금 관리 시스템 통합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이 중앙정부 민간보조금과 지방정부 민간보조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고도화됩니다.

2. 시사점

가.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필요

정부는 제재부가금 상한을 부정수급액의 최대 8배까지 상향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한 환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 전반으로 점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전적·상시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 규정 및 승인 절차를 정비하는 등 조직 차원의 통제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보조금 집행 증빙 및 회계관리 강화 필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확대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증빙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집행 관련 증빙자료의 사전 표준화, 회계 처리 기준의 명확화, 정산 단계에서의 이중 점검 절차 도입 등 회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현장 점검 및 조사 대응 체계 구축 필요

정부의 일제 점검 확대 및 중앙 관리 체계 도입으로 현장 점검 및 조사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점검 착수 시 대응 절차, 자료 제출 기준, 대외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제출되는 자료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제재 여부 및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조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전 모의 점검 등을 통하여 대응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편을 수반하고 있고, 향후 시행령·고시 등 하위 규정을 통한 적용 기준의 구체화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앙관리체계 강화에 따라 부정수급 판단 기준 및 제재 수준의 운용 방식도 점차 통일·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내부 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보조금 전문팀’은 보조금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정부 조사 대응, 제재부가금 및 환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자문 등 보조금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하여 전문적인 대응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관련구성원

배호근

변호사

02-316-4006

hkbae@shinkim.com

강문경

변호사

02-316-4302

mkykang@shinkim.com

김민관

변호사

02-316-1735

mkwkim@shinkim.com

이승혁

변호사

02-316-4235

shyulee@shinkim.com

임철갑

변호사

02-316-1979

cgim@shinkim.com

조한준

변호사

02-316-7949

hajcho@shinkim.com

최유정

변호사

02-316-7289

yjchoi@shinkim.com